

‘현대제철’, 비정규직 탄압 악질사업장 1호

노조 ‘간접고용 비정규사업위원회’ 기자회견 ... “직접고용 원·하청 직접교섭 나오라”

금속노조가 ‘현대제철’을 비정규직 노동 탄압 악질사업장 1호로 선정했다.

금속노조 ‘간접고용 비정규사업위원회’는 3월 31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법원·노동부의 불법파견 판결과 판정, 노동부·인권위원회의 직접고용 시정 명령, 권고를 무시하고 ‘자회사’ 입사를 강요하는 현대제철을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은 자신의 불법행위를 제소한 노동자를 제거하는 보복의 길을 택했다”라며 “소송과 무시로 시간을 끄는 작전은 통하지 않는다. 당장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원·하청 직접교섭에 나오라”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저지른 비정규직 노동착취, 노동탄압, 죽음의 공장을 만드는 위험의 외주화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2022년 간접고용 노동의 고통을 없애고, 노동 현장에서 불법파견을 없애는 투쟁의 고삐를 더욱 조일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원청 현대제철은 자회사 이적 강요를 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하청노동자를 자회사로 몰기 위해 현장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순천,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선전활동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회 위반 시 1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게 해달라며, 돈으로 노조 활동을 막으려 한다.

금속노조는 “위장 하도급 불법파

견 범죄집단이 불법 시정을 요구하는 피해 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자본의 탐욕과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라고 규탄했다.

3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

규직지회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 현대제철 대한 하청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결정이다.

노동 법률가들은 ▲현대제철이 자회사 직고용으로 과거 불법파견기간 끼친 노동자 손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청과 원청사이의 불법파견이 자회사와 원청이라는 불법파견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악마의 편집·제목 장사로 노조 죽이기

[팩트체크] 조선일보 3월 28일 “노조 수 많을수록 신규채용 위축”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앞두고 노동조합 때리기에 골몰하는 가운데, 노동조합을 이용해 제목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월 31일 금속노조가 <조선일보> 3월 28일 자에 손호영 기자가 쓴 “노조 수 많을수록 신규채용 위축”이라는 기사를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짜 맞춘 악마의 편집과 제목 장사의 전형’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손호영 기사는 기사 앞부분에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연구위원의 보고서 「MZ세대 노사관계 의식 특징과 시사점」을 인용해, MZ세대가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목표로 공유하며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 독자 노조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손 기사는 기사 중반 이후에 김세움 연구위원의 보고서 「향후 청년 일자리 변화와 대응 : 기업 인사관리 및 청년층 의식 변화를 중심으로」를 가져와, 노조가 늘거나 가입률이 증가하면 신규채용 비율이 감소한다고 썼다

노조는 “<조선일보>가 다른 두 연구 결과를 이어붙여 MZ세대의 노조 설립이 ‘외부구직자의 입사 문을 좁히고’, ‘질 좋은 일자리 취업 장벽을 높인다’라는 결론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선일보>가 이 기사에 ‘노조가 늘어나면 신규채용이 줄어든다’라는 결과에 짜 맞춘 제목을 달아 노동조합이 일자리 확대의 걸림돌이라는 인상을 풍겼다”라고 비

판했다. 노조는 기사 제목의 논리가 이상하다며 “노조가 늘 때마다 신규채용이 준다면 조직률이 50%를 넘나드는 외국은 신규채용 자체가 짝 막혀야 한다”라고 비꼬았다.

기사가 인용한 보고서에서 김세움 연구위원은 경향성을 인과성으로 해석하는 시도를 경계했다. 김세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노조 수가 늘어나 재직자 해고·퇴직 관련 보호 정도가 높아져 자연스럽게 청년층 비중이 낮아진 것인지, 늘어난 노동조합 수가 기업 경영 효율성에 부정 영향을 주면서 청년층 채용이 활발하지 못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유보했다.

노조는 “조선일보는 이런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필요한 부분, 보고 싶은 내용만 추려냈다”라면서 “노동조합의 일반 목적이 고용의 안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조직률과 채용률의 인과관계는 이직과 해고의 감소 여부와 함께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김세움 연구위원이 보고서에서 ‘노조 조직률이 신규채용을 위협한다는 결론 내리지 않고, MZ세대 노조가 추구하는 공정성 제고 기치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정성이 아니라 내부자 만의 공정성으로 그칠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선일보>가 이것마저 앞뒤 자르고 가져와 연구자와 보고서가 MZ세대 노조 증가가 신규채용

위축을 주장하는 것처럼 편집했다고 짚었다.

김우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일보>가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향 분석을 이용해 ‘노조가 늘면 해고가 어려워지고, 경영 효율이 떨어져 신규채용이 줄고, 청년 일자리가 준다’라는 논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우식 노조 연구위원은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채용에 부정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본이 노조 약화를 위해 신규채용을 꺼린다”라면서 자본이 고용을 외부화, 외주화하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우식 연구위원은 하도급, 사내하청 비율을 포함해 분석하면 <조선일보>의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선일보가 발표 시점이 상당히 지난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찾아내 이어붙여 억지 논리를 만든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방향을 지원사격 하려는 의도다”라고 꼬집었다.

윤석열은 선거운동 내내 노동유연화를 강조하며, “해고가 쉬워야 채용이 늘다”라는 ‘고용 낙수효과’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노조는 “일 자리를 늘리는 목적은 사라지고 일자리 수에 연연한다”라면서 “조선일보는 윤석열의 주장을 현실화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인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악마의 편집을 단행했다”라고 규탄했다.